

7.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8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2일
- 상정일자 :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2월 16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신고포상

금 위임근거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위원회의 심의, 포상금의 지급 제한, 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포상금의 환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4조).
- 부칙은 2023년 1월 1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조례안 입법 배경은

-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⁸⁾(이하 “법”이라 한다) (2021. 7. 13. 시행)로 변경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법 및 같은법 시행령⁹⁾에서 위임한 보조금 법령위반 등의 신고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시행규칙으로 운용되었던 보조금 신고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안에 통합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에 관한 규정 체계】

현 행		⇒	변 경	
상위법	규율방식		상위법	규율방식
지방재정법	“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법 시행령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⑤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방법을 규정하였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첨부, 제출자료 보정 요구 등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신고의 신뢰성을 담보하였음.
- ▶ 안 제4조에서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실무사항과 담당부서별 역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총괄부서(예산담당관)
 - 사실확인 및 위법 여부 조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 각 사업부서
- ▶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하였고,
- ▶ 안 제6조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시기를 법령 등 위반행위가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 또는 소송의 확정 판결이 그 시점임을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동일한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하여 접수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수령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 **안 제7조**는 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정하되, 신청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었음.

※ 지급액 예외 규정(제7조제2항 각호)

- 감액 :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30%미만
- 증액 :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 한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금액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단,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한도)

한편, 본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조례 포상금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 조례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였음.

- ▶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사항과 심의 안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회 심의사항(제9조)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안 제10조**에서는 신고 받은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새로운 것이 아니거나,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1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종결 요건을 규정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가 없거나, 포상금 지급기준 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 **안 제1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 ▶ 안 제13조에서는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사후라도 부정 한 포상금 수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 안 제14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 ▶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정하였음.

○ 이 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법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간 규칙으로 운영되었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규정을 조례로 승격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상위법 시행(‘21.7월) 시기에 비해 조례정비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음.

○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었을 때에는 조례가 없었는지?	○ 네. 지방재정법일때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운영하였음.
○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 '18년 제도 시행이후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별도 없음.
○ '18년 제도 이후 신고가 1건도 없다는 점은 제도 운용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홍보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22년 대구시 민간보조금 규모는?	○ 올해는 3,400억원 내년에 3,900억원 정도가 편성되었음.
○ 상위법이 '21.7월 시행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 운영예규 등이 조금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지적인 바와 같이 그럼에도 다소 조례 제정이 늦어진 측면은 있음.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대책은?	○ 체납징수에 준해서 환수를 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겠음.
○ 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에 있어서 보증보험증권을 도입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네. 검토해보겠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